

“시의회가 바지저고리냐?”

대구시, 숙원사업비 33억 불용처리 의원들 “예산심의권 무시했다” 발끈

대구시에서 시장이 의회요구에 동의한 사업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구시의회가 발끈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구자동 운영전문위원회는 2005년도 대구시세입세출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서 공항주변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불용처리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공항주변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에 13억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4대 시의회가 심의를 하면서 20억원을 증액한 33억원으로 확정해 조해녕 전 대구시장의 동의를 받았다. 그

러나 대구시는 올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향후 재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열린 결산심사장에서는 이경호 의원(비례)이 “지난해 10월 버스준공영제 시행 홍보물 제작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고 따지며 “적은 예산도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오곤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섭기자